

국무조정실

☎110-760 / 종로구 세종로77-6 국무조정실 / 전화 3703-3807 / 전송 723-1966
조사심의관실 과 장 강 태 옥 서기관 양 홍 석



문서번호 국무심평 16060 - 41

시행일자 2003. 3. 22 .()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보존기간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조정관	유종상		
심의관	김복영		
과장	강태옥	기획심의관 개신	
기안자	양홍석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2003년도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지시 (국무총리지시 2003 - 1 호)

1.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사회 곳곳에서 형식과 권위주의의 타파, 토론문화의 확산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새로운 개혁의 비전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우리 앞에 직면한 대내외의 각종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변화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와 자기혁신을 통해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 참여정부의 국정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2003년도 공직기강 확립 추진지침」을 시달하니, 각급 기관의 장께서는 불임에 의거 기관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

아울러,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의 성패는 무엇보다 기관장의 의지와 효과적인 내부통제기능에 달려 있는 만큼, 전공직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공직기강 확립대책이 밀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2003년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05, 11, 23~86, 나 01~18, 다 01~18 (77개 기관)

국무총리지시
제 2003 - 1호

2003年 公職紀綱確立業務 推進指針

‘03. 3

國 務 調 整 室
(調查審議官室)

目 次

I. 評價 및 與件診斷	1
□ 推進狀況 評價	1
□ 與件診斷	2
 II. 公職紀綱確立對策 推進	3
1. 目 標	3
2. 基本方向	3
3. 推進體制	4
4. 細部 推進方案	5
5. 行政監査 및 指導訪問의 運營 改善	11
 III. 行政事項	12

I. 評價 및 與件診斷

□ 推進狀況 評價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5년간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개혁, 전자정부의 구축, 부패방지법의 제정 및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02.1) 등을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개혁의 틀을 갖추었으며,
 - 각급 사정기관은 소관별로 취약분야·인물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활동 전개 등으로 공무원들의 반부패 의식이 확산
△정계공무원수('98~'01) : 6,140('98)→6,057('99)→4,507('00)→3,682('01)
 - 아울러, 각급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취약시기 감찰 강화, 취약분야 제도개선, 금품·향응수수 근절, 일하는 방식 개선 및 목표관리제 실시 등 공직문화 쇄신을 통해 공직사회가 점차 투명화 되어감
- 그러나, 「국민의 정부」 5년간의 다양한 반부패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 아직도 일선기관의 인사, 공사발주, 인·허가 등의 분야에 금품수수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 공직자의 권위적·일방적인 업무처리 행태 등은 자율과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흡하고, 일부 공직자의 특권 의식과 도덕 불감증은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을 초래

□ 與件診斷

- 국내적으로는 국정운영에 국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 행정전반에 국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새정부의 국정 목표와 개혁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변화와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 필요
 -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
 -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 ▲ 더불어사는 균형 발전사회
 -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 국제적으로는 UN, WTO, IMF 등 국제기구에서 부패에 대한 각종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나,
 - 국제투명성기구(TI)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수준은 40위권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10위권)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연도별 부패지수 추이(순위/조사대상국)
- : 43/85('98년), 50/99('99년), 48/90('00년), 42/91('01년), 40/102('02년)
- ※ '02년 조사결과 : 핀란드(1위), 미국(16위), 일본(20위), 중국(5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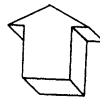
- ⇒ 새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국민참여 속에 공직문화를 혁신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대폭 제고
 - ⇒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강력 추진

Ⅱ. 公職紀綱確立對策 推進

1. 目 標

目 標

- 새정부의 국정목표와 시대정신의 구현 및 국정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봉사와 효율의 신뢰받는 公職風土 造成



- ▷ 부정·비리 공직자의 엄단과 公職社會의 反則文化 清算
- ▷ ‘참여정부’의 패러다임에 맞는 生産的 公職雰圍氣 造成
- ▷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엄정하고 自律的인 紀綱確立

2. 基本方向

- ◇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한 시스템적인 개혁 추진
 - 부조리의 악순환 차단과 공정한 신상필벌의 원칙 확립
 - 국민참여제도 내실화, 민·관 공조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 공직자의 반칙문화 청산과 자율과 참여의 근무기강 확립
 - 공직자의 봉사정신 함양, 의식개혁, 솔선수범 강화
- ◇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과 과감한 사기증진대책 추진
 -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사기증진, 능력발전 프로그램 확대

3. 推進體制

□ 「公職紀綱 關係 長官會議」運營（委員長：國務總理）

- 참석 :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위원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 부패방지위원장,

- 운영 : 상·하반기 정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직기강 확립 추진전략, 실적 평가 및 보완대책 논의

□ 「實務 委員會」運營（委員長：國務調整室長）

- 참석 : 법무·행자부 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 청와대 공직기강·사정비서관, 국무총리 심사평가조정관

※ 부방위 사무처장,

- 운영 :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의 세부 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간 정보교환, 분야별 감찰방향 협의 등

□ 「全部處廳 監査官會議」運營（主宰：國務調整室長）

- 참석 : 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감사담당관), 서울시 감사관 등(필요시 정부투자기관의 감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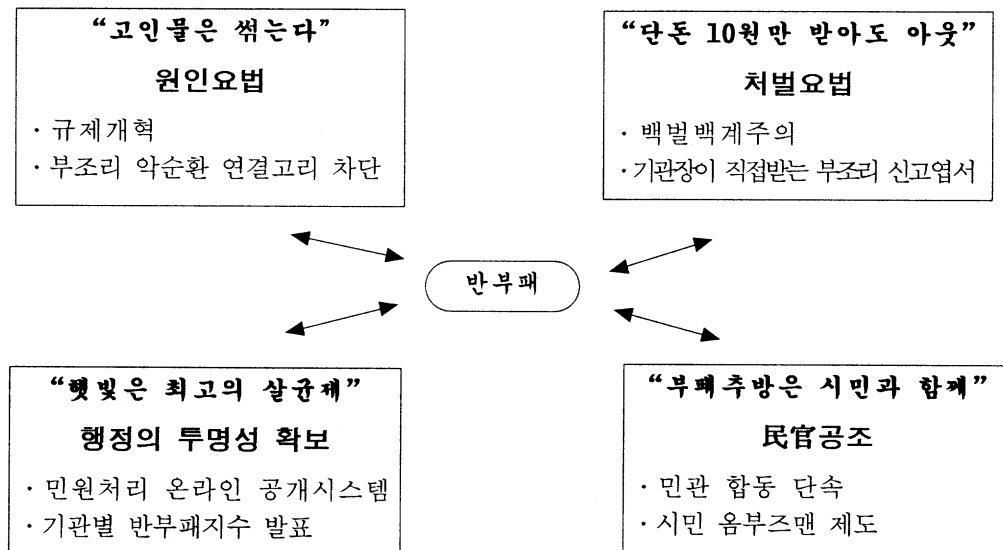
- 운영 : 장관회의,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시달, 각 기관의 대책추진 독려 등을 위해 수시 개최

4. 細部 推進方案

가.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개혁 추진

- 원인요법과 처벌요법,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관 공조등 4가지 근원적 시책을 시스템적으로 접근
⇒ 부패방지와 기강확립을 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시스템적 접근 개념도



Ⅰ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및 대책 수립

- 법령·제도·관행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부패발생 원인 분석
 - 반부패 전문가그룹(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과의 워크숍·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반영
 - * 전문가 그룹을 반부패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 적극 활용 방안 강구
 - 부패발생 원인별 근원적 방지대책 마련·적극 실천
- 기관별 자체 반부패 제도개선 노력 강화
 - 인·허가 규제 등 각종 행정규제의 지속적 완화·개선
 -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의 전기관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부조리 예방을 위한 「청렴계약제」 시행 확대
 - * 제 1, 2, 3단계 부패방지종합대책('98~'02년) 용역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과제 적극 실천

② 공직자 「클린신고센터」 운영 및 활성화(전부처청)

-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된 경우 선의의 공직자 보호를 위한 「클린 신고센터」 설치·운영
- 미설치 기관은 조속한 시일내 설치토록하고 기설치 기관에서도 운영실태를 점검, 활성화 방안 강구

③ 공직사회 부패추방에 국민참여 확대

- 시민 옴부즈만(감사관)제도 확대실시
 - 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권고
 - * 서울시 운영사례 : 시민단체·감사원·검찰로부터 각 1명씩 추천 받아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
- 단속·점검업무 등에 관련 시민단체 참여 확대
 - 교통·위생·식품 등 민생분야의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한 대국민 신뢰제고

④ 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 부패행위가 고질화 된 분야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집중 점검 및 적발시 백벌백계 조치

※ 취약분야 중점점검과제 : 예시

- ▲ 건설분야 : 부실업체 등록, 불법하도급
- ▲ 금융분야 : 신용보증과정의 부조리, 기금 운용과정상의 부조리
- ▲ 인사분야 : 정부 및 산하기관 인사관련 금품수수
- ▲ 조달분야 : 조달단가 과잉산정,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부조리
- ▲ 소방분야 : 소방점검과정의 부조리
- ▲ 식품분야 : 인·허가, 단속과정의 부조리

나. 공직사회 반칙문화 청산과 자율과 참여의 근무기강 확립

- 공직이 특권이 아닌 국민봉사 실천이라는 의식개혁을 통해 공무원의 반칙문화를 일소
- ⇒ 공직자가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주체로서 건강하고 화합하는 사회 구현에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Ⅰ 공직자의 봉사정신 함양과 솔선수범 강화

- 우리경제의 대외여건 불안정으로 인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절약 시책, 자동차 10부제 및 기초질서 지키기 등에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강화
 - 각 기관별로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실시
- 공·사 생활에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하는 생활자세 확립
 - 사치성 해외여행, 호화 음식점·유흥업소 출입, 해외 골프 등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자제
 - 카지노 도박, 불륜 등 사생활 문란행위 금지
 - 특히, 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각종 편의제공 도모 등 특권 지향적인 행위 금지
- 아울러, 공무원들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
 - 우수 미담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적극 홍보
 - 미담 공무원은 기관장 격려, 자체포상 등 우대조치

② 기관별 자율과 참여의 근무분위기 확립

- 기관별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시 소속직원 참여 강화
 - 제정 과정에 보다 많은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및 반영
 - 자체 교육 및 월례조회, 각종 교육과정을 통해 적극 교육
- 기관 홈페이지에 직원과 기관장 사이의 Hot-Line 마련 및 활성화
 - 직원의 근무애로, 고충 등을 파악하는 대화의 장으로 활용
- 타 실·국별에서 추진중인 주요정책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부처별 주요현안 사항을 이해하여 적극적인 지지 및 참여자로 개혁 동참 유도
 - 특히, 정책형성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 기회 확대

③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 철저하고 공정한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 지탄 공직자 公職에서 排除
 - 무사안일, 책임전가, 직무유기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關聯者 嚴重 問責
 - 대민접촉이 많은 일선기관의 비리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인사비리, 선심성 예산낭비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강화
- 腐敗脆弱分野·시기별 특별감찰활동 및 기강에 대한 집중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다.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과 과감한 사기증진대책 추진

- 국정개혁의 주체인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감 있는 개혁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기증진 대책을 추진
- ⇒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적극 지원

①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 방식의 개선

- 積極적이고 創意的인 業務遂行 姿勢 堅持
 - 선례답습 관행 등으로 인해 선례가 없는 경우 업무처리를 회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업무수행 태도에서 탈피
- 근무시간중 주식투자, 오락행위 등 私的業務를 자제하여公私區分 철저 및 密度있는 勤務慣行 정착
- 不合理한 공직내부 規制撤廢, 대기성 야간근무지양, 불요불급한 각종 회의자제 등 不合理한 勤務行態 개선
-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비상근무체제 정비

② 인사운영 시스템 개선

- 公正한 人事評價體制 構築
 - 학연·지연 등에 의한 緣故主義 人事根絶
 - 보직·승진 등 인사청탁의 철저한 배제,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성과에 입각한 인사평정 실시
 - 다면평가제 정착 및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확대
 -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常時 모집체제 확립

③ 과감한 공무원 사기양양대책 추진

- 공직기강업무 추진과정에서 우수 공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분기별로 정부포상 등 실질적인 우대 조치 실시
 - ‘정부합동점검단’에 「우수공직자 선발위원회」를 두고,
분기별로 우수공직자를 포상
- ※ 포상규모 : 분기별 30명 내외('02년) → 분기별 10명 내외('03년)
- ※ 선발기준, 절차, 포상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2002년과 동일
- 목표관리제의 내실화 및 하위직의 승진기회 확대
 - 성과와 기여도,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시스템 및 목표관리제를 개선·보완
 - 직급간 불균형 해소, 기능직공무원 직급 상향조정 등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방안 추진
- 인사·복무제도, 근무여건 등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 민간고용휴직제, 육아휴직제도 개선, 탄력적 근무제도
도입, 후생시설 확충 등 복지시책 적극 추진
- 각종 정보화·리더쉽 양성·어학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능력발전 프로그램 확대·지원
- 해외연수기회 확대 추진
 -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단기 교육훈련 확대

5. 行政監査 및 指導訪問의 運營 改善

① 「行政監査規程」의 徹底한 履行

- 지정된 종합감사주기의 이행, 국가감사활동 정보시스템 (NAIS)의 적극 활용으로 과다 및 중복감사 방지
 - 각급 기관은 과다·중복감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종합·부분감사는 사전에 통제기관에 의한 철저한 조정·통제를 실시하는 등 감사계획의 통제 강화
- 감사생략제 및 계층제 감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합동감사 활용으로 감사효율성 제고 및 수감부담 경감

※ 행정감사규정의 개정필요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 예정

② 指導訪問의 調整·統制 強化

- 불요불급한 지도방문 억제
 - E-mail·FAX·전화·문서에 의한 지시 또는 보고 등으로 대체가능한 지도방문 금지
-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감사규정」 제29조의2에 의해 각 기관에 설치된 「지도방문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중앙행정기관에 준하여 실시
 - 시·군·구 및 시·군·구교육청은 기관장 책임하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엄격히 통제

Ⅲ. 行政事項

1) 2003年度 公職紀綱確立 細部施行計劃 樹立・施行

- 각급 기관의 장은 기관별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2003년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공직기강확립 관련 기 시행한 지침은 동 지침으로 같음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2003년도 공직기강확립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기 종료 10일내에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에 보고(제출양식은 별첨1~5)

2) 2003年度 行政監査計劃 樹立・施行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도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2003.4.12(토)까지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에 제출(제출양식은 별첨6)

※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에 의한 “2003년도 행정감사업무 기본방침”은 동 지침(Ⅱ. 5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의 운영개선)으로 같음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종합결과」를 연도종료후 30일이내에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에 보고(제출양식은 별첨7)

3) 特別監察活動의 持續的 展開

- 기 추진중인 자체감찰계획에 따른 점검활동 철저 시행
- 각급 기관은 부패취약 분야 및 시기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

4) 推進狀況 點檢・管理

- 국무조정실에서는 각급 기관장의 推進意志, 監察活動實績 등 주요 추진상황을 指標化하여 半期別로 점검・평가하고 연말 기관평가에 반영
 - 우수기관의 공직기강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조치
- 아울러, 각급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자체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관리 강화

【별첨 1】

비위 공직자 적발실적(전부처청, 분기별 누계 작성)

구 분		계	본 부 (청)	소속기관	산하단체
합 계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직 원			
부 정 부 패	금품 향응 수수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직 원		
	공금 횡령 유용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직 원		
공 직 기 강 해 이	무사 안일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직 원		
	업무 부당 처리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직 원		
	복무 규정 위배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직 원		
	품위 손상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직 원		
	중요 자료 문서 유출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직 원		
	기 타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직 원		

《 주요 적발 사례 》

○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비위 공직자 징계 등 조치실적 (전부처청, 분기별 누계 작성)

구 분		계	징계요구			기 타			형사 고발
			소 계	중징계 (파면, 해임)	경징계 (정직, 감봉, 견책)	소계	면 직	주의·경고	
합 계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원 직 원							
부 부 패	금 품 향 응 수 수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원 직 원						
	공 금 향 응 유 용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원 직 원						
공 직 기 강 해 이	무사 안일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원 직 원						
	업무 부당 처리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원 직 원						
	복무 규정 위배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원 직 원						
	품위 손상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원 직 원						
	중요 자료 문서 유출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원 직 원						
	기 타	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산하 단체	임 원 직 원						

※ 비위사실 조사중 또는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는 제외. 기타 유형은 적발·조치사례를 기준으로 양식하단에 주요유형을 열거 정리
 ※ 참고 : 직급분류기준 : 3급이상≒경무관이상≒소방감이상≒대령이상, 4~5급≒경정이상≒소방령이상≒중령이상, 6급이하≒
 경감이하≒소방경이하≒소령이하, 교육직 등 전문직은 일반직 직위와 비교하여 분류

【별첨 2】

사정기관의 감찰실적 (검찰청 · 경찰청)

구 분	유 형	인 원	구 속	불구속
총 계				
공직비리	소 계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금횡령			
	기 타			
공기업·정부투자기관 비리				
부실기업· 금융기관 비리				
사회지도층 비리				
지역토착비리				

《 주요 적발 사례 》

-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별첨 3】

금융부문 단속실적 (금감위)

구 분	단속건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총 계				
벤처기업 관련 비리				
코스닥 관련 비리				
금융·증권 관련 비리				
금융기관 직원 비리				
기 타				

《 주요 적발 사례 》

-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별첨 4】

민생침해 사범 단속 실적 (검찰청 · 경찰청)

구 분		단속건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총 계					
강·절도 등 생활침해 범죄					
마약 등 강력 범죄					
3대(조직 · 학교 · 성) 폭력 범죄					
집단 이기주의 등 불법행위 단속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기 타					

《 주요 적발 사례 》

-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별첨 5】

부패방지 제도개선, 교육·홍보실적 (부패방지위원회)

구 분	주요 실적	향후 추진일정
제도개선 분야		
교육홍보 분야		

【별첨 6】

2003도 행정감사계획

(○ ○ 부)

☐ **종 합**

구분	감사 종류별(횟수)				대상 기관별(횟수)					감사 연인원 (명)	총감사 일수(일)
	계	종합 감사	부분 감사	기강 감사	계	본부	소속 기관	자치 단체	기타		
합계											

☐ **감사내역**

연번	감사 시기	감사 기간	감사 구분	대상 기관	감사 인원	감사사항	비 고

< 작성요령 >

- 감사내역 :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
- 감사시기 : “○월중”으로 기재
- 감사기간 : ○일간으로 기재
- 감사구분 :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로 구분 명기
- 감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산관리, 예산회계, 조세분야 등
-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

【별첨 7】

2003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종합 결과

(○ ○ 부)

1. 감사실시 상황

감사 대상 감사 종류	합 계						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당해)년		(전) 년		증 감		(당해)년		(전) 년		증 감		(당해)년		(전) 년		증 감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계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 감사 종류별, 대상별(본부·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증감사유 설명 (전년대비)																		

< 작성요령 >

※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감사만을 기재

2. 감사 실시상황(기관전체 종합)

구 분 수감기관별			총 감사 대상기관수	자 체 감 사								외부감사	
				계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횟수	기관수
총 계													
중앙 행정 기관	중앙(본부)												
	소속 기관	계											
		1 차											
		2 차											
		3 차											
지방 자치 단체	시·도 및 교위												
	소속 기관	계											
		1 차											
		2 차											
		3 차											

